
법무부 업무보고

2026. 08. 05.

I. 지시사항 및 외부 반복 지적사항 추진상황

1 지시사항 추진상황

- ◆ 총 212건(추진 93건, 훈시 119건), 추진과제 완료율 69.9%(6.30.기준)
- ◆ 추진 중인 지시사항 중 1개월 내 완료 8건, 연내 추진 7건, 차년도 2건 등

※ 완료과제 제외

연번	지시사항	추진현황 및 향후계획	완료시기
1	징벌적 배상제도 도입(25.6월)	○(현황) 일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방안 검토 ○(계획) 개정안 확정 후 입법 추진 예정('26.7.~)	26.9월 (국회상황에 따라 유동적)
2	법원의 판결·결정,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등 대국민 공개 추진(25.6월)	○(현황) 민사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관련 「민사소송법」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('26.7) ○(계획) 국회 입법 적극 지원(계속)	26.12월 (국회상황에 따라 유동적)
3	배임죄 개선방안 마련(25.7월)	○(현황) 배임죄 개선방안 마련('26.6.) - ①5개년 배임죄 판례 3,300건 사실관계 분석·조문화, ②연구용역 5건 실시, ③형개특위 7회 논의 등 ○(계획) 배임죄 개선방안 마련 후 보고('26.7.)	26.7월
4	행정법령 중 처벌조항 조사·점검(25.7월)	○(현황) 법무부·재경부·법제처 공동으로 '범정부 형벌 합리화 TF' 및 실무지원단 구성 중('26.7.)	27.12월
5	신속한 형벌체계 정비(25.12월)	○(계획) 실무지원단 구성 후 형벌 합리화 기준 마련 하여 불필요한 형벌 규정 정비('26.7.~.)	
6	상소(항소·상고) 제도 개선(25.9월)	○(현황) 대통령비서실과 개선방향 협의 중, 개선안 관련 지침 개정안 초안 일선청 의견 수렴 중('26.7.) ○(계획) 대통령비서실 협의 결과, 일선청 의견 등 반영 하여 관련 지침 개정안 등 최종 개선안 마련('26.8)	26.8월
7	차별·혐오 근절 대책 수립(25.11월)	○(현황) 차별·혐오 대응 관련 「형법」 개정안들이 발의('25.11.)되었으나 소위 미상정,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논의('26.2.~3.) ○(계획) 국회 입법 적극 지원(계속)	26.7월 (국회상황에 따라 유동적)
8	혐오 발언 대응 신속 추진(25.11월)	○(현황)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「형법」 개정안 법사위 소위 심사 중('25.12.~),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논의('26.2.~3.) ○(계획)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논의 내용 바탕으로 소위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예정(계속)	26.7월 (국회상황에 따라 유동적)

※ 완료과제 제외

연번	지시사항	추진현황 및 향후계획	완료시기
9	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·공소시효 배제 입법 추진(25.12월)	○(현황) 「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 법안」 법사위 소위 심사 중('25.12.~) ○(계획) 국회 입법 적극 지원(계속)	26.8월 (국회상황에 따라 유동적)
10	금융기관에 유리한 제도 개선(25.12월)	○(현황) 소송촉진법 개정안(김승원의원안) 발의 완료 (‘26.7.) ○(계획) 국회 입법 적극 지원(계속)	26.9월 (국회상황에 따라 유동적)
11	공시송달 특례 요건 개선 검토(26.2월)		
12	경미범죄 기소 남용 방지(25.12월)	○(현황) 관련 지침 제정안 마련 위한 유관부서 등 협의, 제정안 초안 마련 중('26.7.) ○(계획) 대통령비서실·대검과 긴밀히 협의하여 최종 관련 지침 제정 예정('26.8.)	26.8월
13	범죄수익 환수 강화(25.12월)	○(현황) 법무부에 범죄수익환수정책과, 6개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 직제 신설 절차 추진 중('26.3.~) ○(계획) 직제 신설, 인력 증원, 예산 등 관련하여 행안부 및 기획처와 협의하여 직제 신설('26.12.)	26.12월
14	교제폭력 대응(25.12월)	○(현황)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도입 완료('27. 4. 시행), 교제폭력 법제화 관련 법안 16건 법사위 논의 중 ○(계획) 교제폭력 법제화 관련 법안 입법 추진('26.7.) -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안 마련 중	26.7월 (국회상황에 따라 유동적)
15	부당이익 몰수추징에 관한 간주 규정 신설 검토(26.2월)	○(현황) 검찰·공정위 TF 회의 개최('26.3.) 등을 통해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 범죄로 얻은 부당이익의 추정·간주 규정 신설 검토('26.7.) ○(계획) 공정거래법 주무부처인 공정위와 의견 조율하여 규정 신설 검토(~'26.9.)	26.9월
16	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유지 여부 검토(26.2월)	○(현황) 광역형 비자 제도 유지 여부 평가 로드맵 구축 (‘26.3.) 및 기초(설문)·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('26.4.~5.), 광역형 비자 전문가TF 회의를 통한 평가 실시('26.6.) ○(계획) 평가 결과 검토 후 제도 유지 여부 발표('26.8.)	26.8월
17	환형유치제도 개선 검토(26.6월)	○(현황) 환형유치제도 관련 제도 및 개선 필요사항 등 현황 검토 중('26.7.) ○(계획) 환형유치제도 개선안 마련('26.9.)	26.9월

2 외부 반복 지적사항 추진상황

연번	지적사항	연도	현황 및 조치계획	완료시기
① 국정감사 반복 지적사항				
1	디스커버리 제도 등 집단적 피해자의 효율적인 구제 방안 마련	2022 2025	○(현황)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'한국형 디스커버리' 도입을 위한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 진행 중 * 의원회 주최 토론회 참여(3. 9.) 참여, 「특허법」 개정안 지식재산처 협의(3. 24.) 등 ○(계획)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 「특허법」, 「민사소송법」 등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바 국회 논의 지원 및 유관기관 협의 진행 총실	계속
2	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소년범죄 처벌 강화 방안 검토	2021 2025	○(현황) '26. 7. 성평등부 주재 공론화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국무회의 논의 - 하향 필요성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, 구체적인 하향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○(계획) 국무회의 논의 취지에 따라 국민 의견 등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구체적인 하향 방안 검토 예정	계속
3	소년원 정신질환자 증가 대책 마련 필요	2023 2025	○(현황) '26. 6. 기준 소년원 정신질환자 비율은 50%에 이르나, 치료를 전담할 정신과 의사는 정원 12명 중 2명(시간선택제)만 근무 ○(계획) 소년원 정신건강 치료·관리 시스템*('24년 구축 完, '25년 고도화) 내실화, 시범운영 중인 원격 의료제도 지속 운영('26년 시범, '27년 확대) * 병력 및 적응정도에 따라 일반·관심·치료군으로 등급 구분 → 차별화된 의료처우 제공	조치 완료
4	계절근로자 무단이탈방지 대책 마련	2023 2025	○(현황)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짧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무단이탈 지속 발생 - 체류기간 연장(기준 5개월 → 5+3개월로 연장 허용, '23.6.) 및 성실근로자 재입국 추천, 계절근로자 고용시 산재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가입 의무화,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('26.5.) 등 조치 ○(계획)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('26.12.)	조치 완료 (미비사항 추가 추진)
② 언론 반복 지적사항				
1	특활비 집행지침 공개 및 사용 개선	2021 2022 2023 2024 2025	○(현황)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특활비 집행지침 개선하여 법무부 관리·감독 기능 강화, '특활비 신청제' 도입으로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, 특활비 지출공개, 사용내역 공개 등 신뢰도 제고 (집행방식) ▲특활비 신청제 도입, ▲포괄 배정(정기분) 폐지 (집행내역) 차년도 결산 시 국민주권정부 대통령비서실에 준하는 집행내역 국회 제출 (관리·감독) 18개 지검 집행 전 법무부 검토·집행절차 도입 ○(계획)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충실히 제출 예정	조치 완료

연번	지적사항	연도	현황 및 조치계획	완료시기																								
2	과밀수용 해결 대책	2021 2023 2024 2025	○(현황) '25년 1일평균 수용인원 63,680명, 수용률 125.8%로 '21년 52,368명 대비 11,312명(21.6%) 증가 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21년</td><td>22년</td><td>23년</td><td>24년</td><td>25년</td></tr><tr><td>정원</td><td>48,980</td><td>48,990</td><td>49,922</td><td>50,250</td><td>50,614</td></tr><tr><td>현원</td><td>52,368</td><td>51,117</td><td>56,577</td><td>61,366</td><td>63,680</td></tr><tr><td>수용률</td><td>106.9%</td><td>104.3%</td><td>113.3%</td><td>122.1%</td><td>125.8%</td></tr></table> - 이에 '21년~'25년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수용정원 2,014명 확충, 가석방 확대 추진 중 ○(계획) '26. 11.경 원주교도소 개청(수용정원 400명 증원), 신축3·이전3·증축 9개소를 신속히 추진하여 '30년까지 과밀률 118%까지 완화, 노역장 유치집행 완화 방안 검토 병행	구분	21년	22년	23년	24년	25년	정원	48,980	48,990	49,922	50,250	50,614	현원	52,368	51,117	56,577	61,366	63,680	수용률	106.9%	104.3%	113.3%	122.1%	125.8%	30.1월
구분	21년	22년	23년	24년	25년																							
정원	48,980	48,990	49,922	50,250	50,614																							
현원	52,368	51,117	56,577	61,366	63,680																							
수용률	106.9%	104.3%	113.3%	122.1%	125.8%																							
3	명동 등지에서 일부 시위의 이른바 '협중시위' 언론 이슈화	2025	○(현황) 연구용역 실시(~'25.12.), 인권국 실무안 수립('26.4.), 현재 의원입법 추진 중 ○(계획) 「인종차별에 기반한 혐오적 언동 대응 및 예방에 관한 법률」 의원 입법 추진	계속																								
4	저임금 외국인력 도입으로 지역경제 악영향 및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지적	2026	○(현황) 조선업 일반기능인력(E-7-3) 비자 발급을 위한 임금요건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설정 ○(계획) 직종별 임금 수준 및 통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취업비자의 적정 임금 기준 마련 추진('26.下) * 연구용역 진행 중	26.12월																								
③ 민원 반복 제기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중대재해범죄 수사 지연	2023 2024	○(현황) '25. 9. 대검을 통해 '중대재해 사건 신속 수사 방안'을 시행하여 사고일로부터 5일 내에 검·경·노동청 수사협의회 개최 등 신속 수사 노력 ○(계획) 신속엄정한 사건 처리에 역량 집중 예정 * 연간 중대재해범죄 사건처리 건수 (22년) 11건 → (23년) 30건 → (24년) 54건 → (25년) 114건	계속																								
2	변호인 접견 개선	2024	○(현황) 수용 인원 증가로 변호인 접견 건수가 지속 증가*함에 따라, 변호인이 사무실 등에서 모바일 기기로 원격 접속하고 최소한의 공간으로 접견실 설치가 가능한 '변호인 스마트접견' 도입 * 21년 252,177건 → 25년 358,065건(+41.9%) ○(계획) '25. 10. 서울구치소 1개 호실 시범 운영, '27상반기 전국 교정기관에 100호실까지 확대	27.上																								
④ 기 타 (감사원·시민단체 등 지적사항)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이원화된 동포 체류자격(F-4, H-2) 통합	2024	○(현황) 방문취업제 인원 감소에 따른 건설업·서비스업 등 분야의 인력부족 - 이에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 부여, F-4 자격의 취업범위 확대 (10개 직업 우선 허용) 조치 ○(계획) 동포 체류자격(F-4) 통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,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공적인 체류자격 통합 완수 추진	조치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

II. 상반기 주요 성과

1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

□ 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으로 지켜낸 국민의 안전한 일상

- 법무부·검찰·경찰 및 유관기관의 수사·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보이스 피싱, 금융증권·가상자산, 마약, 초국가 범죄에 엄정 대응

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(서울동부지검)	▶ 정부 출범 이후 471명 입건, 169명 구속 (이전 3년 대비 월평균 입건 87%↑, 구속 66.7%↑)
금융증권·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(서울남부지검)	▶ 정부 출범 이후 304명 입건, 25명 구속, 부당이득 3,814억 원 추징보전
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(수원지검)	▶ '25. 11. 합수본 출범 이후 조직범죄 집단 8개 세력 등 총 264명 입건, 핵심인물 125명 구속
초국가범죄 범죄인 송환 (법무부)	▶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('26. 1.), '필리핀 마약왕' 박왕열('26. 3.), 해외 해킹조직 총책('26. 5.),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('26. 6.) 각 국내 송환

- 마약류 해외 유입의 1차 저지선인 공항만 세관 통과 시 적발 실패에 대비,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 도입*으로 다층적 안전망 구축

* 안양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 도입 20일 만에 마약류 적발, 배송지 정보·IP 추적을 통해 밀수책·수거책 검거하여 구속 기소 등('26. 6.)

2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

□ 불공정거래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

- 검찰·공정위 「불공정거래 대응 TF 개최」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하고, 전국 18개 지검 민생·물가 안정을 위한 전담 수사팀 편성·적극 지원*

* 18개 지검 민생·물가안정 전담수사팀 대상 수사경비 6.8억원 추경 편성('26. 4.)

〈 주요 우수사례 〉

▶ [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] 검사 6명 주요 담합 사건 초집중 수사

- △ 밀가루 담합(7개 사, 5.9조원 규모), △ 설탕 담합(3개 사, 3.3조원 규모), △ 전분당 담합(4개 사, 10.2조원 규모) △ 유가 담합(2개 사, 14.2조원 규모) 등 사건 수사로 64명 기소(4명 구속)

□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·이민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

- 경제단체 추천 외국 기업인 대상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('26. 1.), 자동 출입국심사 4개국 → 42개국 확대('26. 3.) 등 출입국 편의 증진
- 지역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유학생의 취업을 허용하는 「육성형 전문기술인력(K-CORE 비자)」 제도 시행('26. 2.)

3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

□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법무행정

- 압류금지 생계비(250만 원)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금액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‘생계비 계좌’ 도입('26. 2.)
※ 제도 도입 후 약 5개월간 총 54개 금융기관에서 595,045개의 계좌 개설

□ 사각지대는 없애고 지원은 넓히는 범죄피해자 보호

-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시 피해자가 모바일 앱 지도에서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시행('26. 6.)
- 전자감독 대상자가 별건으로 접근금지된 경우, 경찰이 보호관찰소에 잠정조치 내용·피해자 정보를 공유하여 추가 범행 방지('26. 7.)
* '26. 3. 발생한 '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' 이후 법무부·경찰 협력 대응 방안 구축
- 범죄피해자 유족 구조금 하한을 약 5배 상향(1,600→8,200만 원, '26. 3.), 생계 위기에 직면한 피해자 등에게 ‘긴급생활안정비’* 지급 신설('26. 1.)
* 강력범죄로 전치 5주 이상 신체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피해자·유족 대상

4 과거를 바로잡고 미래로 향하는 법무 혁신

□ 역사를 바로 세우고 과거사 희생자의 아픔을 보듬는 법무·검찰

-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를 위한 「친일재산귀속법」 제정·시행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친일청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('26. 6.)
※ '26. 6. 2기 위원회 출범('26. 12. 예정) 준비를 위한 준비단 설치(단장 1명, 단원 11명)
- 제주 4·3, 납북귀환어부, 여수·순천 10·19 사건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한 검찰 직권재심 청구*를 통해 고령·사망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
*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'26. 6.까지 과거사 희생자 총 228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

□ 정부의 로펌, 국민의 법률 파트너로 국익에 기여

- 정부가 당사자인 국제소송·중재 사건의 연속 승소*로 국부 유출 차단에 기여하고, 타 부처 대상 다양한 국제법무 이슈에 자문** 제공
* ▲론스타, 신들러, 엘리엇 사건 승소 등 국제투자분쟁(ISDS) 3연승, ▲구글·메타 등 다국적기업 상대 개인정보 소송 1심 승소 후 항소심 대응 중
** ▲FTA·BIT·CEPA 등 투자협정 검토 및 협상 참여, ▲12·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주요 현안 대응 지원
- 해외진출 기업 대상 법률상담('26. 上 203건) 및 법률세미나* 등 적극 실시하고, 국가별 법률가이드북을 발간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* ▲세계은행(5. 14.), ▲중동 현안 대응(6. 17.), ▲駐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(6. 18.) 등 현안 관련 법률세미나 다수 개최

Ⅲ. 핵심 추진과제

1 역점 과제

① 소년범 재범 방지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년사범 대전환

- 범죄자 관리·감독 강화, 청소년 재범 방지책 마련 등 범죄예방 통합 체계 구축(국정과제 074-1)

□ ‘소년보호전문기관’ 설치를 통한 전문적 프로세스 도입

- 성인과 함께 관리하고 있는 소년들을 **별도의 전담기관***으로 분리하여 초기비행예방 교육부터 보호관찰 및 사후 연계까지 **원스톱** 처우 실시

※ '25년 기준, 소년 재범률 12.3%로 성인보다 약 3배 높음(성인 재범률 3.9%)

* '26. 3.부터 서울, 광주, 안산에서 '가칭'소년보호전문기관' 시범 운영 중으로, 정식 직제 개편을 위한 「보호관찰법」('26. 4. 발의) 개정 추진

현재	개편 후		
보호관찰소 성인+소년(동일 기관) 	<table border="1"> <tr> <td> 성인보호관찰소  </td><td> 소년전담기관 (청소년비행예방 + 소년보호관찰 통합)  </td></tr> </table>	성인보호관찰소 	소년전담기관 (청소년비행예방 + 소년보호관찰 통합) 
성인보호관찰소 	소년전담기관 (청소년비행예방 + 소년보호관찰 통합) 		

- 전문기관을 주축으로 학교·경찰·지자체·복지기관 등 **지역사회와 협력(HUB)**하고, **치료·회복에 중점**을 둔 ‘K-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’[^①진단→^②처방→^③개입(치료)→^④재활→^⑤사후관리] 마련하여 **밀착 관리**

□ 범죄의 원인을 진단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소년 교정·교육

-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소년원생이 **증가***하고 있음에도 정신과 전문의 부족으로 적기 치료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**원격의료** 확대**

* '22년 기준 369명(전체 37%) → '26. 6. 기준 502명(전체 50%)

** 소년원 - 정신과병원 화상 기반 진료, '26. 5. 대전·안양소년원 시범운영 중

- 주요 범죄 요인인 가족관계 단절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**가족 참여형 프로그램**을 활성화하고, **보호자용 콘텐츠**를 제작하여 자녀의 소년원 생활에 대한 이해를 도와 **정서적 유대 및 신뢰 형성** 지원
- 교정시설에서도 소년 수용자와 가족 간 **관계 회복**을 위한 다양한 **프로그램**을 충실하게 운영하고, 소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**심리 치료 범위**를 부모까지 **확대**하는 방안 시범운영 실시*('26. 下)

* '26. 5.~7. 김천소년교도소 4가족, 청주여자교도소 2가족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소년 수형자 및 부모 동시 심리치료 완료

② 법제부터 현장 대응, 일상 회복까지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

- 관계성 범죄 방지를 위한 선제조치 도입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고도화(국정과제 074-2)

□ 스토킹에서 교제폭력으로 넓히는 피해자 보호 법제

-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‘피해자보호명령’ 제도 도입(’26. 4. 개정, ’27. 4. 시행)
 - ※ 잠정조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신청·청구를 거쳐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을 받을 수 있으나,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조치 가능
- 「스토킹처벌법」상 잠정조치(전자장치 부착·유치장 유치 등) 대상 범죄에 교제 폭력 행위 유형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 추진(’26. 下)

□ 가해자보다 한발 앞서 피해자를 지키는 실시간 위치 연계

-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실시간 위치가 경찰에 전달되어 즉시 출동하도록 ‘잠정조치 연계시스템’ 개선(’26. 12.)
 - ※ ’24. 12. 스토킹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재범방지 효과 탁월, 정보 공유 속도 개선을 통해 현장 대응력 제고



□ 언제 어디에서든 접근 가능한 ‘범죄피해자 온라인 통합지원 체계’ 구축

- 한 곳에서 14개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‘원스톱 솔루션 센터’* 운영(대방역 인근, ’24. 7.~)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 실시
 - * 검찰·경찰·서울시·고용노동부·범죄피해자지원센터·스마일센터 등 14개 기관 참여
- 나아가 온라인 접속만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 시스템 개발 중(’27. 1. 대국민서비스 예정)
 - * 기관별 예산 확보·시스템 구축 상황이 상이하나 정례 협의체를 통해 적극 추진

③ 처벌을 넘어 치료·재활까지 책임지는 마약류사범 집중 관리 시스템 운영
- 마약류 중독 차단·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(국정과제 074-4)

□ 재범위험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도·감독으로 마약 재범 차단

-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*이 개시되면 1개월 이내 심층면담과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중독 정도에 따라 단계별 관리 실시

* 검찰의 ▲조건부 기소유예, 법원의 ▲선고·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·치료·수감명령 병과, ▲벌금 또는 실형 선고(형기 내 미집행된 경우) 시 이수명령 병과로 보호관찰소에서 집행

※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동종재범률 3.3%(‘24년 기준, 전체 마약사범 재범률 34.5%)

약물 중독 정도	기소유예자 ‘사범-치료-재활’ 연계모델	▶ 치료·재활 프로그램*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약물검사 및 프로그램 이행 여부 확인 * (치료) 복지부 치료보호기관, (재활) 식약처 마퇴본부 함께한걸음센터 - ‘23. 6. 제도시행 이후 ‘26. 5.까지 총 462명 실시, 재범자 6명으로 재범률 1.3%, 현재 128명 관리 중
	일반 대상자 약물검사	▶ 초기부터 약물검사 실시, 불시검사 확대*하여 재범 여부 점검 - ‘26. 5. 불시검사 8,446건 실시(전년 동기 대비 13.8% 증가)
	집중 대상자 특별 지도	▶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담 직원이 매뉴얼에 따라 집중면담 실시 - 전문성 강화를 위해 ‘중독심리사’ 자격증 취득 확대(‘26. 12.) ▶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외부 중독전문가 연계상담 진행

□ 반입은 막고 중독은 끊는 교정시설 마약류사범 대응 강화

- 마약탐지장비(이온스캐너) 추가 설치(現 14대 → ‘26. 下 24대)하고, 법무부·관세청 마약탐지견 합동 점검* 확대하여 시설 내 마약류 유입 차단

* ‘26. 3. 법무부·관세청 마약탐지견 활용 상호협력의향서 체결

- 확대된 전담 시설·조직 활용*하여 투약사범 대상 수준별 재활프로그램 및 집중 재활프로그램(회복이음과정) 수료인원 지속 증가 추진

* ▲전담교정시설 (‘26. 2.) 6개 → (‘26. 6.) 13개, ▲중독재활수용동 (‘25. 12.) 2개 → (‘26. 1.) 4개로 각 확대, ▲ 4개 전담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재활과 신설(‘26. 1.)

※ 재활프로그램 적극 실시로 마약사범 재복역률 5년간 15.9%p↓(‘25년 기준, 일반 사범 재복역률 4.0%p↓)

〈 현장 목소리 〉

- ▶ [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(‘26. 4.)] 민간 중독재활단체 NGU 남경필 대표 “부산교도소 모델 확대 등 교정시설 내 치료 예산·인력 확충 필요”
- ▶ [마약류 안전관리 현장토론회(‘26. 4.)] 치료보호기관장 등 전문가 “치료·재활을 강제할 제도와 법률이 있어야 하며, 교정시설이 가장 좋은 치료·재활기관이 될 수 있다”

④ 기업에는 신뢰를 지역에는 활력을 더하는 법무행정

□ 세 차례 「상법」 개정으로 두터워진 주주 보호 제도의 현장 정착

- 1차*('25. 7.), 2차**('25. 9.)에 이어 자기주식은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3차 개정('26. 3.)하여 주주환원 강화
*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, **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 의무화
- '전자주주총회 제도'(1차 개정 시 도입, '27. 1. 시행)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「상법 시행령」 개정('26. 7.)하여 국내외 주주들이 장소의 제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□ 경영판단은 존중하고 중대범죄는 엄정 대응하는 배임죄 정비

- 기업인의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, 경영활동과 무관한 중요범죄에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추진*
* 배임죄 판례 3,300여 건 분석, 전문가 자문 회의,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논의 및 연구용역 등 진행 → 대체입법 마련

< 대체입법 방안 >

- ▶ 「형법」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① 중요범죄를 유형화*하여 특례법안 형태로 규정하는 방안과 ② 「형법」에 '재산관리의무위반죄'를 신설하는 방안 등 검토
* ▲재산상 이익의 직접 취득 ▲재산상 이익의 간접 취득 ▲현저히 불합리한 조건의 거래 ▲영업상 주요한 자산 유출 ▲부실대출 ▲부동산 이중매매 등

□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숨통을 풀어내는 출입국·이민 정책

- 농·어업 핵심인력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(8개월) 개선 요구에 따라 숙련도 평가 후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'농·어업 숙련 비자' 도입
- 외국인 고용 요건* 충족이 어려워 구인난에 시달리는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'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'** 마련('26. 5.부터 2년간)
* 3개월 이상 고용된 내국인 최소 1명 이상, ** 내국인 고용하지 않더라도 사업 지속기간·근로여건 등 요건 충족 시 '지역특화형 우수인재' 고용 가능
- 수도권으로 집중된 의료관광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자비자 등 혜택이 있는 '우수 유치기관'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가점 신설
※ 現 90개 기관에서 확대 지정 예정('26. 7. 공고, '26. 9. 심사위원회 개최 및 기관 지정)
- 단체·의료관광 전자비자 처리기간을 단축(現 8.3일 → 목표 3일)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증원하고 디지털 심사 방식 도입 추진

5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드는 법무행정 AI 전환

- AI 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(국정과제 006-4)

□ 이상 행동을 치료의 신호로 읽는 치료감호 체계 고도화

- 고위험 피치료감호자의 특이 행동을 AI 기반 CCTV로 실시간 인식·분석하여 치료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행동분석시스템 확대*

* 발달장애인 병동에 시스템 도입('25. 12.) → 전 병동에 적용('26. 12.)

※ 환자들의 이상·공격행동 빈도 48%↓, 사회성 향상 등 행동 개선 효과 확인

□ 간편하게 신청하고 더 정밀하게 심사하는 AI 출입국 행정 개편

-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비자·체류 민원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,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를 지원하는 'AI 비자심사 도우미'를 개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
- AI를 활용하여 입국위험 요소를 사전에 누락 없이 파악·선별 후, 고위험자는 정밀 심사, 저위험자는 자동출입국 등 신속한 입국심사

□ 국제 논의 참여로 앞당기는 인공지능 법제 정비

-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AI 규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AI 협약*을 관리하는 유럽평의회 신기술운영위원회에 옵저버로 가입('26. 7.)

* 인공지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'24. 5. 세계 최초로 성안된 협약으로, 미국·일본·영국 등이 서명하고 EU가 비준

- 지속적인 위원회 총회 참석을 통해 국제 동향을 추적하고 협약 가입 및 국익에 부합하는 국내 AI 법제 마련 주도

2 개혁 과제

1 세월의 장벽을 넘어 완성하는 정의와 피해회복

□ 국가권력으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다하는 법무·검찰

- 국가폭력범죄*에 대한 피해회복과 정의실현을 위해 형사상 공소시효를 배제하고, 민사상 소멸시효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제정 계속 추진('26. 下)

* ▲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범한 살인, ▲「형법」상 독직폭행·가혹행위로 인한 사망·중상해, ▲「군형법」상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·중상해 등 범죄

②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 이행과 국민 권익 보호

-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(국정과제 003)

□ 공소청 출범 준비기구 운영으로 성공적 제도 개편 추진

- 개청지원단(법무부)·준비단(대검찰청)을 구성하여('26. 5.), 직제·인력·예산·법령 등 쟁점별 협의·검토를 통해 변화될 형사사법제도의 안착 도모
- 「공소청법」 개정에 따른 기관 간 권한충돌, 누락 문제 방지를 철저히 점검하여, 세심하고 빈틈없는 관계 법령 및 하위법령 개정

□ 피해자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 체계 마련

- 수사·기소 체계 전환기를 맞이하여 범죄 대응 역량이 유지되도록, 피해구제와 민생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는 절차를 갖추고, 수사 초기부터 기관 간 협력하여 신속하게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 수립
- 주가조작·기술유출·중대재해 등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법률적 지원과 적법절차 보장 강화

< 현장 목소리 >

▶ [검찰개혁추진단 주관 특별사법경찰관 간담회*('26. 5.)]

- * 금융위, 지식재산처, 식약처, 농산물품질관리원, 서울시, 경기도, 부산시, 울산시 특사경 참석
- 특사경 관계자 “특사경이 지휘없이 독자적으로 했을 때 절차상 위법 등 문제로 수집한 증거가 채택이 안 되거나 법왜곡죄로 고발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”

□ 국민을 위한 선진 형사사법제도 구현

- 적법절차 점검·송치 사건 법리 검토로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, 공익대표·송무 등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 역량 제고

③ 국민의 상식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합리화

□ 범정부 협업으로 덜어내는 과도한 형벌 규정

- 행정제재로 충분한 위반까지 형벌로 다루고 있다는 지적 계속
- 형사처벌 조항 상당수가 개별 행정법률에 산재하여 부처 단독으로는 정비가 곤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무부·재경부·법제처 공동 ‘범정부 형벌 합리화 TF’ 및 실무지원단 구성하여 추진 예정

□ 가벌성에 비례하는 경미사안 처리 기준 체계화

- 경미재산범죄*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더라도 기소유예 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지침 제정·시행('26. 1.) 중으로, 대상 확대 검토
- * 절도·횡령 등 피해품이 소비성 재화이고 피해금액이 극히 적은 경우
- 사회봉사 등 기소유예 조건을 다양화하는 지침 마련 예정

3 국가정상화 과제

① 오피스텔을 비롯한 非아파트의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

- ‘깜깜이 관리비’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지원
 - 오피스텔과 같은 非아파트 집합건물은 관리비 산정 근거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분쟁 발생 빈번
 - 건물 종류나 규모와 무관하게 관리비 납부자가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「집합건물법」·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개정안 발의('26. 6.)

② 소액·다수 피해자들의 적절한 권리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

- 다수인의 피해를 하나의 소송으로 구제하는 「집단소송법」 제정 지원
 - 증권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어, 그 외 소액·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 소송이 진행되어 피해 구제에 한계
 - 적용분야를 한정하지 않는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 추진('26. 下)

③ 외국인 인권·권익 기반 출입국·이민정책 전환

- 전화 한 통으로 닿는 인권침해 대응과 쉼 단계 보호 체계
 -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 장벽·체류 불안으로 인권침해 신고를 주저
 - ①입국 전 인권교육 의무화, ②입국 직후 근로계약서 작성 등 고용주 준수사항 안내, ③입국 3개월 이내 취약 사업장 집중 모니터링
 - 외국인종합안내 콜센터(1345)에 전용번호(1번) 부여*('26. 5.), 신고 시 전담팀**이 24시간 내 현장조사 실시 후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

* 전용번호 부여 전 상담건수 월 평균 22건 → 구축 후 1개월간 142건 접수(6.4배↑)

** 이민자 인권·권익팀(본부),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(43개 기관, 총 100명) 운영

④ 일부 수용자의 과도한 행정심판 제기 방지 대책 마련

- 심판청구 남용 대응을 통한 권리구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
 - 일부 수용자의 반복적이고 무익한 청구*에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「행정심판법」 개정 지원

* (사례) 교정 관련 행정심판 1,060건 중 수용자 1인이 451건(42.5%) 청구('25년 기준)

4 기타 현안과제

① 사인간 채권 연체 위기 채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

□ 회생 신청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까지 함께하는 무료 법률 지원

- 대한법률구조공단*을 통해 △개인회생·파산 신청자 대상 무료 법률 상담 및 구조 제공, △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상 채무자대리 및 대부계약 무효소송 등 지원

* 전국 134개 사무소, '26. 7. 기준 전국 12개 개인회생·파산종합지원센터 설치

구분		2021	2022	2023	2024	2025	2026. 1.~5.
개인회생·파산	법률상담	97,718	90,185	93,348	81,419	75,679	38,526
	법률구조	19,533	19,461	23,814	23,481	23,529	9,662
불법사금융	지원건수	4,841	4,510	3,249	3,096	11,083	6,684

□ 찾아오기 전에 먼저 알리는 위기 채무자 지원망 확충

- ‘법률구조 플랫폼’(’26. 1. 개시)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‘채무자’를 검색하면 권리구제에 필요한 서비스와 유관기관을 한 번에 안내
- 새도약기금* 연계를 통하여 법률지원 대상을 확대하고, 개인회생·파산 종합지원센터의 추가 설치(’26. 7.)를 통한 지역 인프라 강화

* 상환능력 상실 장기 연체자에 대해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·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(25. 10. 출범)으로,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체결

- 라디오·OTT·SNS·포털 광고, 취약계층 접점 유관기관(행정복지센터 등) 리플릿 배부 등 집중 홍보로 제도 인식 확산

②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

□ 과밀해소 및 전담 처우와 치료·재활을 이끄는 교정청 신설

- 한정된 시설 내 지속적인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누적된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조타운형 교정시설 신축 등 구조적 대응 필요

※ 수용률 '16년 121.2% → '25년 125.8%, 준공 후 25년 경과 교정시설 비율 65%

- 재복역률이 20%대 초반을 담보하는 상황으로, 모든 수용자를 단일 체계로 관리하는 현 방식으로는 재범 요인별 처우에 한계

※ 재복역률 '25년 기준 21.2%, 최근 10년간 마약사범·정신질환자 각 2배 급증('25년 기준 각각 7,429명, 6,345명)

- 특성별 전담 교정시설 운영을 통해 치료·재활 중심의 처우를 확대하고, 이를 전문적으로 총괄할 교정청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 지원

③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까지 책무를 다하는 형집행 체계 확립

□ 도피와 재산 은닉을 반드시 추적할 시스템 고도화

- 확정판결에 따른 자유형·재산형의 집행은 국가형벌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바탕임에도 **제도적 한계와 인력 부족**으로 실효적 이행 곤란
※ 최근 5년간, 자유형 집행률 55~60%로 정체, 재산형 집행률 35% → 27%로 저하
- 미집행자의 위치 파악 및 재산 추적 목적의 **압수수색 제도**를 도입하여 날로 **고도화되는 회피 수법**에 **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**
※ 현행 제도에서는 통신내역만 확보 가능하여, 대략적인 추정근거지 인근 잠복·탐문 활동으로 검거하는 실정
- 대구지검 시범운영 성과*에 착안하여 **인력 보강**을 통해, △자유형 미집행자 검거팀을 **세분화·전문화**하고, △국세청 ‘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단’과 유사한 **재산형 소재탐지검거팀**을 구성해 형집행을 제고
* '26. 3.~4. 형집행 중점청으로 지정하여 인력·조직을 일시 보강한 결과, 자유형 집행률 2.1배, 재산형 검거인원 12.8배, 건수 8.9배, 금액 22.5배 증가

□ 촘촘한 제도와 전담 조직으로 형집행을 완결하는 범죄수익환수

- 범죄수익환수는 수사부터 재판, 재산추적, 집행 및 피해자 환부로 완결되는 업무로, 검찰은 **쏠 과정에 관여하는 유일한 기관**
- **시세조종 범죄에 제공된 원금까지 환수**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‘**독립몰수제**’* 도입을 지속 추진하는 등 **법령·제도 설계 지원**
* '26. 4. 법사위 통과, 시행 시 형사처벌과 독립하여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·추징 청구할 수 있고, 법원의 결정으로 범죄피해재산을 환수한 뒤 피해자들에게 환부 가능
- **본부에 범죄수익환수정책과**를 신설*하여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**주요 6개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** 추가 설치하여 **역량 강화**
* '27년 정기직제 심사 중으로, '27년 초 설치 추진

④ 인권친화적이고 균형감 있는 사법처리 방안 모색

□ 교화 없는 유치를 줄이는 노역장 제도 개선

- **노동 능력이 없는 노동자·환자** 등에 대한 집행은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**재정·행정적 비용 부담**만 발생하는 실정
-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합리적으로 **확대***하고 **약식절차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**이 가능하도록 「형사소송법」 개정 추진('26. 下)
* 현행법상 ‘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’에 ‘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’를 추가